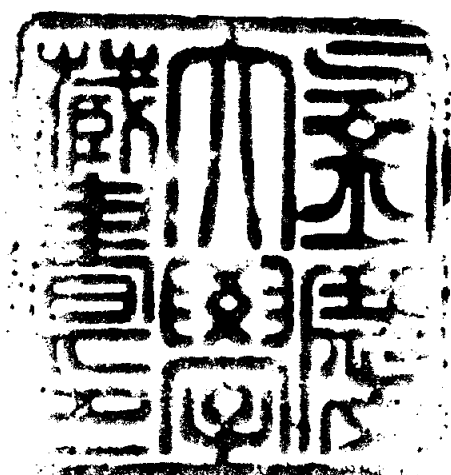


714
2254
110
-2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연구

지도교수 홍 장 표



2003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제 학 과

김 일 만

김일만의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12월 26일

주 심 경제학박사 강 세 훈



위 원 경제학박사 서 석 흥



위 원 경제학박사 홍 장 표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자유주의의 발달과정 -----	5
제 1 절 자유주의의 형성 -----	5
제 2 절 자유주의의 변화 -----	12
제 3 절 신자유주의의 대두 -----	17
제 3 장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론 -----	26
제 1 절 자유주의의 기본명제 -----	26
제 2 절 자유주의 명제의 검토 -----	29
제 3 절 자유주의 명제의 평가 -----	38
제 4 장 하이에크의 시장경제론 -----	45
제 1 절 지식과 경쟁 -----	45
제 2 절 경쟁과 계획 -----	50
제 3 절 자율과 조화 -----	55
제 5 장 결론 -----	60
참고 문헌 -----	64
ABSTRACT -----	68

제 1 장 서 론

서양의 근대사회를 지배해 온 주된 가치관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자유와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관념은 정치·경제체제와 같은 사회체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념에 대한 접근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특히 자유주의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현대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며 자유주의의 기본이념을 새로이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중의 대표적인 경우가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이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계획경제가 초래할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¹⁾의 출판으로 일반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 책의 출간 이전에 오스트리아 학파²⁾의 전통을 이은 그의 경제이론에서 자유주의의 성향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사상은 특히 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가 초래한 거대 정부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자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하이에크의 사상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³⁾ 본

1) 이 책이 나온 해가 1944년이니, 지금부터 58년 전의 책이다. 이 책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한 불후의 명저이다. 당시 사회주의가 새로운 세계의 건설을 외치며 일취월장 그 세력을 떨치고 있던 60여 년 전에, 심지어 자유주의 문명을 꽃피웠던 영국에서까지도 온 사회가 사회주의 지향적인 사상으로 넘쳐흐르며, 사회주의 이상을 표명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인 행세를 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하이에크는 이미 그 사상이 인류를 노예로 만드는 길임을 간파하고, 그것은 언젠가 혁명과 반혁명의 내전으로 또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끝내 패망할 것임을 예언한 책이다 (김영철, 1992 : 274).

2) 이 학파는 오스트리아의 멩거 (Carl Menger)로부터 시작해서 뵘-바베르크 (Eugen von Böhm-Bawerk), 비저 (Friedrich von Wieser), 미세스 (Ludwig von Mises), 슈페터 (Joseph Schumpeter), 하이에크 (Friedrich von Hayek)로 이어지고 그 후 미국의 뷰케넨 (James M.Buchanan), 로스바드 (Murray N.Rothbard), 커즈너 (Israel m.Kirsnier), 모스 (Laurence S.Moss)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설사상 한계혁명을 일으킨 한계효용학과 중의한 학파이다. 자유주의의 가장 철저한 옹호자일 뿐만 아니라 대처와 레이건 이후 각국의 경제정책에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준 학파라고 할 수 있다 (박종찬, 2002 : 401).

3) 박우희 (1982), 민경국 (1993), 조순 외 (1995), 민경국 (1996), 임일섭 (1999).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발달과정의 역사적인 측면과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그의 시장경제 원리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유주의는 서구적 현상이요 근대의 산물이다. 역사적 산물로서의 자유주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현실적 요구를 낳았다. 자유주의의 다양성은 무엇보다도 그 근본 가치관념인 자유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접근에 기인한다. 이것은 특히 자유와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자유 없는 평등은 가능한가 또는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자유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어느 시대의 자유주의도 해결해야 할 중심과제였다. 이것은 또한 평등의 실현은 언제나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유와 정치권력의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첫째 과제로 자유주의 사상의 형성과정과 자유주의 사상체계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정치권력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규명해 보고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자유주의의 변화와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자본주의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비적 검토를 수행한 후 본 연구의 중심과제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이러한 자유주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제 3장에서 고찰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다양성은 자유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접근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하이에크가 자유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구명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그의 자유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명제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및 경제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사회철학적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사상이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한 그의 통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연구 활동이 최초에는 경제학에서 출발하여 점차 다른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되어 갔다는 사실이 입증하는 것이지만 특히 그의 시장경제이론에서 전개한 중요한 개념들은 그의 사회사상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마지막 제 5장 결론으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역사적 및 경제이론적 고찰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가능케 할 것이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사상사(思想史)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박충석, 1982:256-273). 첫째 지성사 (intellectual history)의 전통에서 다루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시대의 사상이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지식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의 방법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은 그의 사회적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의 명제에 입각하여 사회의 상부구조로서의 사상이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어떻게 구속되는가를 규명한다. 세 번째로는 한 시대의 사상은 그 사상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달리 수용되므로 이러한 측면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회의 성격의 분석과 정신 분석이론이 활용된다. 네 번째로는 개념분석의 방법이다. 즉 중심개념이 어떻게 규정 해석되며 수용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연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 2장과 제 3장에서 지성사의 전통에 입각하여 개념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특히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사상을 세 개의 기본명제(basic propositions)로 요약하고 그 의미의 해석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의 명제는 검정(檢定)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檢討)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명제들의 성격은 그 진위가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로써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제 4장에서의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이론에 대한 고찰은 그 목적이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어떻게 시장경제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므로 몇 가지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서술적인 분석에 그칠 것이다. 이론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실증적인 방법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요하는 말은 “자유주의”이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에서의 자유주의란 libertarianism의 역어이다. 자유주의(liberalism)란 용어는 현대에 와서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하나는 국유화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강제적 간섭 특히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에 서는 흐름이다. libertarianism이란 후자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란 말은 본고에서는 모든 자유주의의 흐름을 총칭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엄밀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어를 앞에 붙였다. 예를 들면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하이에크의 자유주의(Hayek's libertarianism), 신자유주의(libertarianism) 등으로 구분하였다.

제 2 장 자유주의의 발달과정

제 1 절 자유주의의 형성

자유주의는 근대적 산물이며 또한 서구적 현상이다. 서구의 근대는 중세의 봉건제도에 대한 개인의식의 발달에 힘입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발흥하게 된다. 이 시대의 개인주의 정신은 생활과 사상의 전역에 침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인주의 정신은 자유주의의 근거가 된다. 즉 “종교에 있어서의 불가지론(不可知論), 철학에 있어서의 경험주의, 윤리학에 있어서의 공리주의, 경제학에 있어서의 자유방임주의, 정치학에 있어서의 반독재주의, 국제 정치학에 있어서의 평화주의, 반제국주의 및 자유무역 그리고 성별, 계급, 종교, 인종의 차별 없는 평등과 같은 이러한 모든 개인주의의 표현은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이었다.”(Hayek, 1949 :1-32).

이러한 개인주의의 바탕 위에서 천부인권설이 싹트게 되는데, 이때의 권리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였다. 이 때의 자유는 구속 또는 강제에의 부재를 의미하였으며 이러한 구속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정치권력이었다. 따라서 정치권력을 소유한 정부 혹은 국가의 영역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된다(Macpherson, 1977). 이때부터 소극적 자유의 개념(notion of negative freedom)이 나오게 된다(Berlin, 1969:118-172). 구속이란 “타인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내가 행동할 수 있었던 영역 안에서의 타인의 고의적인 간섭을 의미하며 따라서 불간섭의 영역이 크면 클수록 나의 자유도 커지게 된다.”(Berlin, 1969:122-23).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곧 정치적으로 최소 정부를 의미하게 되며 이것은 정치권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정치권력의 제한을 요구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두

명제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자유란 본질적으로 구속의 부재를 의미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구속이란 정치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자유는 언제나 정치권력의 제한을 요구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시대였다. 정치권력의 간섭은 배제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목표였다. 이러한 사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경 국가론과 자유방임론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명제들은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수정을 받게 되는 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과도한 개인의 자유의 추구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권력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힘(economic power)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출현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적극적 자유의 개념(notion of positive freedom)이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을 그린(Gree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의 이상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이 자신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Berlin, 1969:133).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다음의 두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유란 개인 능력의 최대한의 실현이다. 둘째 따라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그것의 장애물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일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 권력의 행사는 사회 일면의 개인권리와 상충하게 된다.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서는 바로 이 점이 최대의 과제로 등장한다. 즉 자유와 권력의 균형이 문제가 된다. 라스키(Laski)에 의하면 "근대 문명에 있어서 자유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에 아무런 구속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속하고 있는 사회에 구속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수(數)의 압력과 욕망의 다양성이 규칙과 강제

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자유와 필연의 권력과의 사이에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다."(Laski, 1954:49).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둘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둘로 나눈 것과는 무관하게 자유주의의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우선이 되어 온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권력은 그것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두 개념은 결국 하나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도 그것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홉스(Hobbes)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생활 이전에 자연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며 이러한 자기 보존의 본성이 곧 자유이며 자연권이다(Hobbes, 1958:109).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리요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의 자연권을 적절히 보존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사회계약을 통한 질서의 수립이 요청된다. 계약이란 권리의 상호양도이며 이러한 계약의 보증으로서 하나의 공통된 권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이 곧 국가(common wealth)이며,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다(Hobbes, 1958:130).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단 제도화된 주권자의 권위에 대하여 신민(臣民)은 항거할 수 없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의 한계는 바로 위와 같은 주권자인 레비아단의 절대 권력이었다. 홉스에 있어서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인 것이었다. 즉 자유란 저항의 결핍을 의미하며 자유인이란 그의 힘과 기지에 의해 행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다(Hobbes, 1958:170). 그러나 한편으로 절대주의 하에서 개인의 자유는 복종행위에 의존한다. 즉 왜냐하면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자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복종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Hobbes,

1958:176).

그럼에도 홉스의 의의는 권력의 정당성을 자신의 생명 보존의 본능이라는 개인의 자연권에 입각한, 합의에 근거한 사회계약에 귀속시킴으로써 중세적 세계관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였다는 점이다(Locke, 1952:25).

홉스의 절대주의적 자유주의는 로크(Locke)에 의하여 극복된다.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에 있어서도 인간은 사회 이전에 자연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홉스와는 달리 로크의 자연상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서 인간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성인 명하는 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타인과의 마찰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자연법이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갖는 권리는 생명, 자유 및 소유의 권리(natural rights to life, liberty and property)이다. 인간의 소유권은 자연 상태로 버려진 사물에 노동을 투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불편이 존재한다(Locke, 1952:53-54). 첫째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는 기준으로서의 법률이 없으며, 둘째 법률에 따라 싸움을 판정할 재판관이 없다, 셋째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라도 이것을 집행할 힘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여 시민사회를 설립하게 된다. 로크에 의하면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의 권리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존재했던 것이므로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최대한의 시민적 자유와 교환되지 않고서는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은 공공의 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로크에 의하면 구체화된 시민사회의 이념을 고전적 자유주의라 하는데,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소극적 개념의 자유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즉 소극적 자유의 두 명제에서 보듯이 로크에 있어서 자유란 외부강제가 없는 상태이며 정부의 목적은 공공복지의 실현인 바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권력의 제한이다. 인간의 자연적 자유란 지상의 어떠한 우월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입법적 권력자의 의사

아래 놓여지는 일도 없고 자신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법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대하여,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란 사람들의 동의로써 국가 내에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떠한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입법부가 자기에게 부여된 신탁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법의 구속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ics)의 체계로 확장시킨 것은 스미스(Smith)였다. 스미스는 정치적 권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중상주의 비판을 통해서였다.

스미스에 있어서 중상주의(mercantile system)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표상이었다. 왜냐하면 중상주의 정책은 단지 기업가(business man, trader)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국부 증진 상 도움이 되지 않는 특혜와 규제를 그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스미스 당시의 중상주의 하에서는 담합하고 독점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가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은 이용당하고 있었다. 스미스는 이러한 중상주의 체제하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며 기업가의 사리추구는 결코 공공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이 중상주의적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은 결코 힘들지 않다. 그것은 이익을 아주 무시당해 왔던 소비자가 아니라 그 이익이 지켜져 왔던 생산자라고 우리는 믿어도 좋을 것이다. ... 중상주의적 여러 규제에 있어서는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특히 가장 잘 배려되어 있고 다른 여러 생산자군의 이익이 그 희생으로 되어 왔다(Smith, 1993:139-15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미스가 자유방임을 옹호한 이유는 특혜와 규제를 철폐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국부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스미스의 자유방임의 주장은 근면한 성향을 발휘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질서(institutional order)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

한 제도적 질서란 시장기구로 대표되는 경쟁질서(competitive order)를 의미한다. 경쟁질서에 의거할 때, 기업가의 반사회적 행위는 규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기능은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하여 그리고 자유로운 진입과정을 통하여 부적절한 기업을 도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자유방임 사상은 결코 정부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스미스의 자유방임 사상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영국 정부의 기반은 매우 약하고 또한 기능은 매우 비능률적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패해 있었다고 한다.⁴⁾ 정부의 비능률과 부패에 당면하여 최선의 방책은 정부 기능의 최소화였다. 그러나 자유방임은 결코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스미스는 자유방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는 중상주의적 특혜와 규제의 철폐를 통하여 시장의 경쟁질서의 회복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⁵⁾ 사실 스미스는 영국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당시 베니스나 암스테르담 정부의 활동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베니스나 암스테르담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Smith, 1993:770). 즉 정부의 역할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스미스는 분업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지적·사회적 미덕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교육을 통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mith, 1993:735).

지금까지 살펴본 홉스, 로크 및 스미스의 이론은 소극적 개념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서 가능하면 권력에 우선하는 개인의 자유의 최대 확보가 주된 목표였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평등의 문제는 상당히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홉스는 인간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다. 로크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

4) 당시 영국의 선거권은 전체 성인 남자의 3~4%에 불과하였으므로 의회가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며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Dalton, 1974 : 59).

5) 이 논문에서 하이에크는 프랑스적 자유방임을 비판하고 영국의 고전 경제학에서의 자유방임은 결코 무정부주의가 아님을 환기시킨다(Hayek, 1960 : 60).

유로운 동시에 평등하다고 보았으며 사회계약으로 평등이 손상된다고 보지 않았다.

스미스에 있어서 평등은 좀더 치밀하게 다루어지는데, 중상주의의 비판과 관련하여 만일 모든 특혜와 규제가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평등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자유방임 정책은 평등실현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 즉 스미스 또한 인간을 선천적으로 거의 동등한 원자적 개체로 보아 후천적 요인 즉 정부의 특혜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차이, 가정환경의 차이 등에 의하여 불평등은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여러 사람들의 선천적인 재능의 차이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며 가령 철학자와 거리의 노동자처럼 가장 닮지 않은 성격상의 차이는 본성에 의하기보다는 습성, 풍습 및 교육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스미스는 보고 있다. 스미스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는 따라서 기회의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의미하였으며 중상주의적 규제와 특혜정책이 폐지되고 자유방임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면 평등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낙관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당시 이들이 대변하는 사회계급은 신흥 시민계급으로서 이들의 당면 과제는 봉건세력에 대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확보였다. 따라서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였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획득이 곧 평등이었다. 한편, 평등이 문제가 되는 계기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인데 홉스에서 스미스에 이르는 시기는 아직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크게 노정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심화과정을 통하여 노동자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데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기에는 아직 노동자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노동자 계급의 요구가 점증함에 따라 자연권사상과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자유주의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로 변화하게 되며 자유주의는 평등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제 2 절 자유주의의 변화

영국에서 입헌주의와 시민적 자유의 원리는 명예혁명(1688)과 그에 의한 권리장전(1689)이 선포됨에 따라 17세기 말, 실제 정치에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입헌주의의 전통은 마그나 카르타(1215)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 동 제 39조에는 개인에 대한 법의 지배를 성문화하고 있다. 즉 “자유인은 적법한 판결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의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동아일보사(편), 1975:28)라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서 모든 나라에 앞선 산업혁명은 19세기에 들어와 영국을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발판을 굳히게 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자유경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자유방임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즈음의 자유주의는 결국 영국의 부르조아적 자유주의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공리주의였다.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벤담(Bentham)은 자연법, 자연권, 사회계약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 대신 공리(util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덕적 원리에 과학적 기초를 두고 이러한 바탕에서 사회제도를 개혁하려 하였다. 벤담과 밀을 위시한 당시의 공리주의자들의 노력은 선거법의 개정(1832)과 곡물법의 철폐(1846)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1832년의 선거법의 개정은 선거권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게 되었는데, 비록 노동자 계급이 배제되었지만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는 지주적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에 타협이 성립된 것이었다. 또한 곡물법의 철폐는 자유무역을 더욱 확대시켜 산업가인

중산계층의 지위 향상에 더욱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 문제는 심각해져 갔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중산 산업계급의 자유주의 및 자유방임을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압력은 한편으로는 공장법(1847), 공중위생법(1875) 및 기타 사회 입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또한 당시의 노동자 문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였다. 그것은 곧 자유주의의 기본명제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그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능동적 개입에 의하여 일반 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으로도 1867년 제2차 선거법 개정 및 1885년의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이리하여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주도하는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밀(Mill)과 그린(Green)의 자유주의 사상을 살펴보고 특히 홉하우스(Hobhouse)와 라스키(Laski)에 이르러 이른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으로서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⁶⁾ 즉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밀에 있어서 자유란 간섭이 없는 상태이며 자유의 본질은 권력의 제한에 있었다. 그러나 밀에 있어서 권력의 남용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에 위협한 것은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였다 (Sabine, 1959:783). 권력을 행사하는 민중과 권력을 행사 받는 민

6)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 절에서 살피고자 하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본 논문의 대상인 신자유주의(libertarianism)는 둘 다 신자유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주장하는 바는 전혀 상반된다. 하이에크나 그의 추종자들이 "libertarianism"이라는 조어(造語)로써 그들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바로 이 절에서 다루는 new liberalism과의 혼동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의 신자유주의란 new liberalism or social liberalism을 의미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서의 신 자유주의는 libertarianism을 의미한다.

중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민주주의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Sabine, 1963:784). 다수의 힘은 소수의 의견을 억압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과 연관하여 밀은 지적 자유를 강력히 옹호한다. 이 점에 있어서 토크빌(Tocqueville)은 「미국 민주주의론」에서 무제한의 권력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는 다수자는 실제적으로 거대한 힘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은 똑같이 거대한 힘으로 되어있다.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없으며 그 거대한 힘으로 소수자를 짓밟고 나갈 때 소수자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자체가 좋지 못한 것이며 장래의 위험을 배태한 것이다.”(Tocqueville, 1835:172).

이러한 위험성에 직면하여 밀은 개인의 개성이야말로 인류문명의 진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한다.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한, 어떠한 간섭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행위에 있어서 대 사회적 한계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것이 그의 소유물인 이상 그의 행위를 비난할 수 없지만 그의 재산에 의지하여 직접·간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것이며 또한 다소간의 사회 전체의 부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 속의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행위의 원칙이란 첫째 상호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이다. 둘째 사회 또는 그 성원을 위해서나 간섭으로부터 방어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자가 자기 몫만큼 부담하는 행위이다(Sabine, 1963:790).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밀의 자유주의는 대중 민주주의 위험성에 직면하여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대 사회적 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인간의 목적은 그의 능력을 완전하고도 아무런 모순이 없는 전

체를 향하여 가장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Sabine, 1963:791).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야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그린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린에 있어서 자유란 “추구하거나 즐길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거나 즐길 수 있는 적극적 힘이나 능력”이었다(Sabine, 1963:792). 여기에서 자유는 적극적인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에서의 적극적 힘이란 경제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는 단순히 강제의 결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외부적 강제가 없다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 즉 일종의 부자유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 빈곤이 그것이다. 그리니 자유를 능력의 실현으로 봄으로써 이후 경제적 자유의 요구가 강력히 대두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영국에서는 다수의 사회입법 내지 사회복지 정책이 점차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유보다는 평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는 점증하는 사회주의적 민주화는 이룩할 수 있었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들은 점차 퇴색하게 된다. 즉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의 전통에 입각하면서도 개인적 자유,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며, 공리주의의 원자론적 사회관을 배제하고 자유에 있어서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고 한다.⁷⁾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수정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평등의 요구로 나타난다. 홉하우스는 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사회가 개인권의 자기 규율력위에 비로소 안전하게 설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에 자유는 개인의

7)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democracy), 집산주의적 자유주의(collectivist liberalism)라고도 한다(Wintrop, 1983 : 84).

권리이기보다는 사회의 필요성이다. 자유는 B에 의해 고립되는 A의 주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는 B의 의무에 의존하는 것이다.”

홉하우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사회는 서로 작용하고 의존하는 유기체인 것이다. 홉하우스는 주어진 신중성과 판단만 있으면 비인간적인 시장법칙이 스스로 사회적 정의를 달성한다고 주장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념을 홉하우스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liberal socialism)라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자유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경제적 자유는 곧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유방임은 배격되어야 하며 경제적 자유를 실현시킬 국가의 역할을 주장한다.

“이는 사실 국가가 재산 일반에 대한 일종의 상위적인 지배권과 산업 일반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국가의 이러한 경제적 주권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기본개념으로서의 경제적 정의의 원리와 조화되어 병존해야 할 것이다.”

홉하우스의 자유주의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의 개인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는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혹은 실질적 자유를 위하여 대 사회적 의무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정의의 실현은 고립된 개인의 권리보다는 유기체적 사회구성원의 상호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도 개인의 재산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그것의 근원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기 때문에 이재적 활동(理財的活動), 투기적 활동, 상속재산 등은 모두 공평한 경제적 분배원칙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20세기 초 영국 자유주의는 이미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나 공리주의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정태적 인간관을 탈피하고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실현시킬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

의의 전환은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노동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노동문제를 혁명을 통하지 않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노동자 문제는 이미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표명되고 있듯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 사이의 계급투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입법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급진적 혁명 없이도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영국의 노동당이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각 산업 및 용역의 민중적 관리와 통제체제를 토대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생산자에게 그들의 근면의 충실한 소산과 그것의 가장 공평한 분배를 확보(The British labour party, 1928)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자유의 실현을 강력히 추구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에도 잘 나타난다. 이제 평등의 실현이 선행되지 않는 자유란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유주의의 논의에서 경제적 문제 특히 소유와 분배의 문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가 최초로 제기한 평등한 자유의 문제나 개인의 자유와 정치 권력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하나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때, 필연적으로 그것은 시대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3절 신 자유주의의 대두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

8) 영국 노동당 내부에서는 많은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점진적 사회개혁을 통하여 혁명없이도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을 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Laski, 1954 : 51).

기는 무엇보다도 1873년의 대공황이었다.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혁명의 성과에 힘입어 공업 생산력이 상당히 증대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기업간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과잉생산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공황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으며 1873년의 공황에서는 방대한 실업자의 발생, 중소기업의 도산, 주가의 폭락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불황에 직면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가지 대책을 시도하게 되었다. 예컨대 상품의 가격을 비싸게 정하여 될 수 있는 한 높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몇 가지의 산업부분의 생산과 유통을 지배할 정책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것을 위한 정책형태가 카르텔, 트러스트, 신디케이트, 콘체른 등의 독점적 조직이었다. 이러한 독점조직을 만들어 이들 대 자본은 점점 거대하게 되고, 종래의 자본주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자유경쟁을 부정하는 기업조직을 만들어 공황에 대처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대 불황에 직면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관세정책으로 대항하여 자국의 거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리하여 경쟁 자본주의는 1870년대의 공황을 계기로 독점자본주의로 전환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은행자본의 집중으로 금융자본이 산업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자 이른바 금융 자본주의와 독점 자본주의가 병행함으로써 더욱 심화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자본의 출현은 지금까지의 고전파 체계의 제 가정의 한계를 쉽게 드러내 주게 된다. 이제는 보통의 능력을 가진 원자적 개인이 경쟁을 통하여 동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힘의 소유자가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개인은 계약내용의 흥정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마저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이른바 부합계약(附合契約) 그

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최대의 명제였던 재산권의 자유는 소유에서 유리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유산자의 재산권 옹호가 노동자의 생존권과 상치될 수도 있게 된다.

이제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독과점(獨寡占)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힘의 집중 현상에 직면하여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가 과제로 된 셈이다.

경제적 힘의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는 길은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데 첫째는 독과점에 대응할 만한 길항력(拮抗力: countervailing power)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독점이나 과점으로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독과점의 규제가 그것이다.

길항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현대 경제에 있어서 권력의 문제를 구명한 것은 갈브레이스(Galbraith)였다. 갈브레이스에 의하면 길항력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은 농민조합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소비조합을 통하여 각기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길항력은 종래의 경쟁을 대신하여 하나의 균형을 가능케 한 것이다. 즉 경쟁력이 판매자 사이 또는 구매자 사이의 시장의 동일 측면에서 작용하고 대기업에서도 경제력이 집중되면 이것은 감퇴하지만 길항력은 시장의 반대측 즉 판매자에 대해서는 구매자, 구매자에 대해서는 판매자에 의하여 행사되며 경제력이 집중되면 이 길항력은 강화된다. 갈브레이스에 있어서는 고전과 이론에서의 경쟁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효과적인 경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가정이 오히려 전도되어 경제력을 가진 길항력이 경쟁을 대신하여 하나의 조정력으로 기능하게 된다(Galbraith, 1956).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또는 new liberalism)로 전환케 하였음을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현대의 신 자유주의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를 몇 가지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 불평

등의 심화를 해소하고 나아가 경제적 평등 없는 자유의 공허함을 주장하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역설한 사회적 자유주의가 집산주의(集産主義:collectivism), 나아가서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은 이후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이념으로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거대 정부를 낳기에 이르지만, 이점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신 자유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은 복지국가의 추구가 초래할 거대정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즈 혁명에 대한 신 자유주의자들의 집요한 저항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제력의 집중현상과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은 불가피하게 시장의 경쟁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시장 기구 그 자체에 고유한 것으로 보고 그 치유책을 시장 기구 밖에서 찾는 방법과 둘째는 시장 기능을 여전히 신뢰하되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의 원인을 외부적 힘이 교란시킨 것으로 보고 시장 기능의 회복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케인즈 혁명에 의한 정부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며 후자의 경우로는 신자유주의의 질서정책(ordnungspolitik)이 있다.

그러나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불완전 고용수준에서도 저축과 투자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고용 균형이론을 비판하고 공황으로 야기된 대량실업은 불완전고용 수준 하에서의 균형에 기인한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이며 이 유효수요의 부족을 정부가 보충할 것을 역설하였다. 특히 케인즈의 논의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보아 고전파의 노동시장 균형이론을 비

판하고 있다. 케인즈 경제학이 갖는 혁명적 의의란 경제를 거시적 총체적 관점에서 보아 시장기능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한 데 있다.

케인즈의 이와 같은 생각은 이미 1926년의 「자유방임의 종언」에서 “현재의 경제학자의 주된 과제는 정부의 관장사항(agenda)과 비 관장사항(non-agenda)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며 정치학자의 과제는 민주주의 내에서 관장사항을 성취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고안하는 것”이라 언명했을 때 이미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케인즈는 여기에서 무지, 위험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경제가 교란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Keynes, 1936:317-318).

우리는 케인즈가 제기한 경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는 케인즈의 개인주의적 사고의 단서가 된 당시의 불황의 원인이 시장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냐 라는 점과 둘째로는 케인즈가 역설한 정부의 개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달리 말하면 정부의 경제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먼저 첫번째 문제부터 고찰하자. 존슨(Johnson)에 의하면 1920년대의 영국의 대량실업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한다(Johnson, 1975:108-122). 첫째는 그 기원이 1890년대 혹은 18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차 상실해 갔던 점이다. 영국은 일찍이 산업혁명에 성공했지만 이즈음 기계의 노후화 및 기타 요인으로 비교우위를 상실해 갔으며 이러한 사실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두 번째 원인은 영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서 이는 영국이 전쟁 전 패리티(parity) 수준의 금본위제도로 환원한 것을 가리킨다. 영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평가절상을 한 셈이 되어 상품의 경쟁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으로 실제로는

상류층과 이자소득자 및 완전고용자(full-time employer)들은 이익을 받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정책자들이 경제를 바르게 보지 못했던 사실을 반영하며 이로 인하여 과도한 외교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펴게 되어 이것은 대량실업을 가속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존슨의 분석은 당시의 대량실업이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고 봄으로써 고전과 경제학의 이론이 여전히 타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즉 케인즈에 있어서 자유방임의 종언의 구체적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케인즈가 자유방임의 종언을 제창하고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지안(Keynesian)들에 의한 경제정책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경제의 계획을 의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오히려 케인즈 자신은 “계획”(planning) 보다는 “경영”(management)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았으며 케인즈 경제학이 케인지안들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정치적인 요인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 등은 케인즈의 수요관리 정책론이 케인지안들에 의하여 추구된 정부의 적극적 경제 개입과 이로 말미암은 거대 정부와는 그 근본 입장이 구별된다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케인즈의 경제 사상은 정부의 경제 개입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자유주의의 원칙은 그대로 견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적극적인 평등의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만연한 극심한 실업과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를 해소하고자 했다는 점으로도 뒷받침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옹호자였던 셈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성이라 여겨지는 것, 즉 경제의 주된 동인으로서의 지독한 개인의 금전적 욕심과 심각하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없다(Keynes, 1963:319). 계급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교육받은 부르조아이다(Keynes, 1963:324). 나는 기술적으로 건전하고 지적으로 건실한 유일한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신뢰한다(Keynes, 1963:326). 개인주의는 만일 그 결점과 남용이 치유될 수 있다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최상의 보호장치이다(Keynes, 1936:380). 나로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불평등은 그렇지 않다(Keynes, 1936:374).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인즈는 자유주의의 원칙들을 그의 사상체계 내에서 그대로 견지해 온 셈이다. 크랜스톤(Cranston)은 케인즈의 경제 사상을 로크의 전통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을 이어온 자유주의로 보고 있는데 그의 논거는 케인즈가 국유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을 유산계급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정부의 관장사항의 내용이 재정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개입주의였던 점을 감안하면 케인즈의 사상은 우리가 앞에서 분류한 적극적 개념의 자유에 더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케인즈가 자신을 자유당원임을 공언하면서도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노동당내의 사회주의자와 신조를 같이 한다고 하여 보수 보다는 노동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힌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케인즈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대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정부역할의 증대와 그로 인한 공공부문의 증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 개입이 용인되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이 추진한 복지국가에 복지예산의 증대로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특히 케인즈 경제학의 적극적 해석을 시도한 케인지안 경제학에 힘입어 전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의 인플레이션 압박과 1970년대에 보이기 시작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초래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이 일반의 관

심을 끌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유럽과 미국에 걸쳐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는데, 이들의 관심은 매우 다양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들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신뢰하고 경쟁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하며 정치적 최소국가(minimal state)를 표방하여 가능한 한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자율의 영역을 확대시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전후 추구해온 경제정책과는 그 기본 입장이 뚜렷이 구분된다.⁹⁾ 신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교란된 시장 기능의 회복을 정책의 목표로 한다. 이른바 질서정책(ordnungspolitik)이다. 둘째 따라서 경제력의 집중으로 야기된 시장 기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힘의 분산에 주력한다. 반독점 정책이다. 셋째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줄인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기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고 이때에도 정부의 독점적 지위는 인정치 않는다. 넷째 중앙집권화 된 경제계획은 반대한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명제들은 개인의 자유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명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권력의 비대화를 자유의 적으로 본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이 신자유주의에 있어서는 경제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거대 정부에 의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개인의 자율의 영역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 기구의 효율성에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순수한 자유주의 혹은 자유방임주의와도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없는 경제정책의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질서정책의 기본 원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

9) 전후의 영국과 미국은 실업과 다플레이션 방지를 위하여 케인지안 경제학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전쟁전의 독재와 인플레이션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의 길을 택하였다고 한다(Hutchson, 1981 : 160-162).

다. 개입과 방임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새로운 종합을 모색한 신자유주의의 경제사상은 하이에크의 모든 저작과 활동에서 잘 들어난다. 우리는 다음 제3장에서 그가 자유주의의 기본이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론

제 1 절 자유주의의 기본 명제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면서 자유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개인의 자유와 정치권력사이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는가에 두었으며 이러한 과제의 사회 철학적 배경에는 자유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 있음을 보았다. 결국 개인의 자유와 정치 권력사이의 긴장 관계는 현실적으로 권력의 담당자인 국가 혹은 정부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가로 귀결되는 것이며, 그 기능의 한계를 어디에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의 고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정치권력사이의 긴장관계를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 개념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또는 이러한 자유의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가라는 측면에서 그의 사상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하이에크의 자유의 개념과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고찰해 본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명제(basic propositions)들에 의하여 표명된다. 첫째 자유는 단순한 하나의 특정가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도덕적 가치들의 조건적 원천이다. 둘째 사회는 본질적으로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또는 코스모스(cosmos)이며 그것은 인간의 의도에 의하여 구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결과이다. 셋째 정의는 적법성(legitimacy)에 근거한다(Hayek, 1960:6).

이들 명제의 의미를 좀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제는 그의 사상의 특징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자유란 사회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철학적 인식론적 대상으

로서의 자유와 일단 분리시킬 수 있다. 사회적 가치로서의 자유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사회적 가치로서의 자유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로서 풍요, 성장, 안정, 효율성, 환경보호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들과 평등, 정치적 신념, 종교 등과 같은 경제외적 가치들을 열거할 수 있다. 하이에크의 첫째 명제는 그가 주장하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자유가 이들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경쟁적 혹은 교환(trade-off)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의 실현이 자유의 실현에 기여하는 보완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하이에크 사상의 이해는 가령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평등을 희생하느냐 혹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유를 희생하느냐의 대립적 관계가 아닌 자유의 실현이 평등의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 즉 자유는 평등 실현의 필요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유는 모든 다른 사회적 가치들의 전체 조건이며 사회생활의 이상이다.

이와 같은 하이에크의 통찰은 근본적으로 사회를 조화로운 질서로 보고 그러한 질서에 의거하여 개인은 스스로 정의로운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에 근거한다. 사회 속에서 개인은 하나의 원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자적 개인들은 사회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소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부분적 지식을 소유한 원자적 개인의 맹목적 행위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한다. 이러한 질서는 자생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자생적 질서 속에서 각 개인은 행동 규칙에 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때 행동 규칙은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규칙 속에서 개인의 이익추구는 보이지 않는 조화에 의하여 질서를 배태한다(Hayek, 1973).

자생적 질서의 원리는 조화의 사상이다. 즉 사회는 그 자체로서도 사회적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의 이익을 커다란 갈등 없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생적 질서의 원리는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의 원리는 경험론의 바탕에서 합리론을 비판한다.

자생적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시장 질서이다. 시장에서는 각 개인의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에 의하여 균형을 찾고 이것은 가격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조화의 개념은 여기에서 균형의 개념으로 대체된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사회는 균형 또는 조화의 상태로 끊임없이 지향해 가는 성향을 지닌다. 따라서 하이에크에 있어서 균형 혹은 조화는 사회의 분석의 전제조건이 된다.

자유주의에 있어서 정의는 적법성이다. 어떤 행위가 적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이러한 논의 이전에 어떤 판별 기준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별 기준으로서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자연권을 상정한다. 이러한 자연권이란 로크에 있어서는 “생명, 자유 및 재산의 권리”로 표현되었으며 하이에크는 위의 첫째 명제에서 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인의 자연권은 어떤 사회제도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정의론은 주로 사회적 정의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 비판의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적법성으로서의 정의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정의론이 환상에 불과한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릇된 근거 위에 서 있으므로 어떤 적법성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세 명제는 모두 개인주의의 원리에 서 있다는 공통점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명제에서 보았듯이 하이에크에 있어서의 자유란 개인의 자유이며 조화와 질서에 있어서도 원자적 개인의 무작위적 행위가 근거가 되고 있으며 정의도 궁극적 목표는 개인의 자연권이었다.

하이에크는 데카르트적인 합리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와 경험론

에 입각한 개인주의를 구분하고 후자만이 자유주의의 이상에 적합한 개인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그의 사상의 배경이 또한 경험론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험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는 한편으론 개인주의의 최대한 확산을 위하여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이러한 최소 국가론은 일찍이 로크 등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자연상태에서 계약에 의하여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회 계약론에서 천명된 바가 있다. 노직(Nozick)은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리의 추구 과정을 통하여 최소국가를 세우게 된다고 한다(Nozick, 1974:12-27). 이러한 최소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가설에 집약되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하이에크는 이들과 같은 입장에 선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하이에크의 세 기본 명제에 입각하여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다음 절에서 서술할 것이다.

제 2 절 자유주의 명제의 검토

첫째 자유란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이다(Hayek, 1960:11).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할 수 없도록 종속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타인의 자의적 의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힘의 불균형,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제도 및 자연적 역사적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의도한 바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강제나 간섭에 의하여 행동할 수 없느냐에 달려있다(Hayek, 1960:12-13). 이와 같은 논의의 배후에는 개인은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자유가 강제가 없는 상태로 정의

될 때 자유는 필연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 내적 또는 형이상학적 자유 그리고 힘으로서의 자유와 구별된다.

먼저 국민이 정부 형태의 선택, 입법과정 및 행정부의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개인적 자유의 개념을 집단에 적용시킨 집합적 자유이다(Hayek, 1960:13).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가령 사람들이 국민투표권을 가진다고 하여 반듯이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투표의 결과 독재정부가 들어와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적 또는 형이상학적 자유란 순간적인 충동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 이성 혹은 신념에 의해 행동하는 범위를 의미한다(Hayek, 1960:15).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자유와 구분된다. 내적 자유의 반대는 타인의 강제가 아니라 순간적 감정이나 도덕적 지적 취약성 등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그들의 의지를 강제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하이에크의 자유의 개념의 특징은 힘으로서의 자유와 비교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자유는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이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힘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자유를 힘과 동일시하면 자유를 제한이나 압박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제한이 없는 상태로서 자유를 정의하면 이는 곧 욕망 실현에의 장애가 없는 것으로서 자유를 정의하기 쉬우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외적 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기 쉽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유효한 힘으로 자유를 정의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힘으로서의 자유와 강제가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는 명확히 구별된다. 가령 장군이나 대기업의 중역은 상당히 큰 힘을 행사

할 수 있지만 반면 상관이나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부자유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보다 더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자신의 의도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유효한 힘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하이에크의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분류한 소극적 개념의 자유와 일치한다. 즉 자유의 우위의 원칙에서 자유란 외부의 강제가 없는 개인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본 자유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Hayek, 1960:20). 하이에크가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인 것으로 정의한 것은 개인의 권리를 외부적 강제로부터 보호하려는 그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부적 강제의 대표적인 예는 과대한 국가의 권력과 집산주의(collectivism) 사회주의 등이다. 만일 자유가 국가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집산주의에서와 같이 힘으로 간주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선택의 범위나 힘을 확대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무수한 입법조치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하이에크가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인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개인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리버티(liberty)와 리버티즈(liberties)를 구별하여 사용하는데, 전자는 원래 의미의 자유 즉 강제가 결여된 상태로써의 개인적 자유를 의미하여 후자는 리버티가 현실에서 쓰이는 경우 즉 정치적 자유나 힘으로써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자유의 다의적 사용(liberties)은 원래 의미의 자유(liberty)가 결여될 때 나타난다고 한다(Hayek, 1960:19).

그러나 이러한 하이에크의 구분은 개인의 자유를 외부적 강제로부터 방어 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유를 강제가 없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이다. 자유의 다의적 사용은 한편으로는 소극적 자유의 현실적 실현 상태로 볼 수 있을 때, 어떤 소극적 자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이에크의 원래 의미의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자유의 다의적 사용의 전제조건이 되어, 자유의 다의적 사용이 원래 의미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을 때는 여전히 자유의 개념으로써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특히 정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라는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즉 정부의 권력 행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의 기능은 인정될 수 있다는 가설을 가능케 한다.

둘째 질서란 “다양한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연관을 맺어 전체의 일부분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전체에 관한 올바른 예측이나 최소한 바르다고 증명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태”(Hayek, 1973:36)이다.

위의 정의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이에크 사상의 구성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지식의 분화(知識의分化)이다. 즉 사회의 어느 누구도 사회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제한된 지식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예측의 근거가 되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개인의 선택은 언제나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경제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나 시장의 이 점은 이러한 선택과정이 가격으로 나타난다는데 있다.

질서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 cosmos)와 작위적 질서(made order : taxis)로 구분된다.¹⁰⁾ 작위적 질서는 대개 단순하며 구체적이고 목적 수행적임이 특징이다. 이에 비하여 자생적 질서는 상당한 정도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며 구성요소 사이의 추상적

10)cosmos란 chaos에 대립되는 말로써 자연현상속의 세계질서를, taxis란 인간에 의하여 자연의 정돈된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Hayek, 1973).

관계의 체계이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회라는 유기적 조직체(organism)속에서 형성된 자생적 질서와 정부·국가와 같은 조직(organization)에 의하여 형성된 작위적 질서가 서로 다른 원리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즉 사회라는 유기체 속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그들의 행위가 일정한 규칙 속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의 질서가 배태될 수 있다. 이러한 질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의 소산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관습으로 일반화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권위나 계급의 강제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기체 속에서는 구체적이며 전체적인 목표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오랜 경험의 소산으로서의 행동규칙만이 필요하게 된다. 미래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의 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의 준칙은 또한 구체적일 수 없으며 단지 추상적 일반적 원칙의 서술일 뿐이다. 그러나 조직은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므로 여기에서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즉 목적 지향적인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자생적 질서와 작위적 질서의 구분은 사회가 일반 조직과는 다른 원리에 입각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로서의 사회규칙은 모든 조직의 규칙에 우선하는 원리이며 따라서 자생적 질서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의 각 조직의 규칙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자생적 질서의 작위적 질서에 대한 우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지식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산재해 있는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산재된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행동으로 배태된 자생적 질서에 의하는 길뿐이기 때문이다.

자생적 질서와 작위적 질서의 구분 및 작위적 질서에 대한 자생적 질서의 우위는 하이에크에 있어서 법을 자유의 법(law of

liberty:nomos)과 입법의 법(law of legislation:thesis)으로 구분케 한다(Hayek, 1973:177-259).

셋째 자유의 법은 조직의 규칙을 제정하는 입법으로서의 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초법적 원리(meta-legal doctrine)이며 정치적 이상이다(Hayek, 1960:206).

자유 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으로 구성되며 미래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적용되며, 개인의 보호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규칙은 다른 규칙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선될 수 있지만, 그 의도는 항구적이며, 상호 수정하는 규칙의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만 유효할 뿐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그 적용이 보편적인 때에만 행위의 추상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반면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었을 경우, 규칙의 전 체계의 목적과는 다른 특정 목적을 가질 수 없다.”(Hayek, 1973:122). 즉 법은 타인에 대한 행위 특히 해를 끼치는 행위를 규제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독자적 영역은 궁극적으로 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지 결코 침해될 수 없다. 또한 법은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법이 특정한 행위를 지칭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추상적 질서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법의 특성은 법의 확실성, 법의 일반성 및 법의 평등성의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법의 확실성이란 사람들이 법정의 결정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완전한 예측이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의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법의 일반성이란 법은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특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법은 추상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경우에 차별없

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의 평등성이란, 법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또한 지배자를 포함하여 똑같이 적용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즉 법의 일반성에 의하여 법이 차별없이 적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과 사회의 여러 다른 계층에는 각기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능력과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자유의 법은 법의 확실성 및 일반성은 잘 충족시켜 주고 있는 듯하지만 법의 평등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즉 자유의 법은 일반적, 추상적이므로 그것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을 낳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평등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적 차별을 상대시킬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법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하이에크의 자유의 법의 원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이에크의 견해는 법의 평등성의 실현은 부분적으로 가능할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차별이 법의 평등성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완전하고도 만족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했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은 목표를 완전하게 결정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따라서 우리의 능력밖에 존재하는 이상의 하나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이 특정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법의 평등성의 이념은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특정인의 기회를 공평하게 증진시킬 것을 지향한다(Hayek, 1960:209-210).

이러한 그의 견해는 법의 평등성 보다는 법의 일반성과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견 법의 일관성과 확실성이 평등성을 가능케 한다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정의는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정의를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자연권에 의한 적법성으로 볼 때 하이에크가 첫째 기본명제에서 자유를 사회적 가치 중에서 가장 우위에 두고 사회적

정의라는 인위적 기준 대신 정당한 예상을 가능케 하는 오랫동안 견지되어 온 입장(Hayek, 1976:93)을 내세워 이것만이 자유의 보장을 위한 적법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는 가장 충실한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정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질서 하에서 사회적 정의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Hayek, 1976:68). ①시장에 기초한 경쟁질서 내에서 사회적 정의의 개념이 어떤 의미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②집행력을 가진 당국에 의하여 서로 다른 개인이나 계층의 행위나 필요를 평가하여 그것을 근거로 시장질서에 사회적 정의의 이름이나 다른 어떤 구실로라도 어떤 형태의 보상을 부과할 때 시장질서는 보존될 수 있는가? 먼저 ①의 문제에 대한 하이에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국가와 사회라는 말을 비교하면 명백해 진다. 즉 국가가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의 행동의 통일을 기하고 의견을 집약할 다분히 의도적인 구성체임에 비하여 사회는 어떤 개인의 의지의 소산이 아닌 수많은 개인과 그들이 수 세대를 걸쳐 내려옴으로써 나타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위들의 결과이다.

그런데 사회적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근대 민주주의와 보통 선거권이 실행되기 이전, 사회의 상부계층이 하부 계층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고자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권력의 기반이 대중에게 있는 현대에 있어서 그러한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와 사고는 그 실현이 반드시 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바, 이것은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와는 달리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파급되므로 이러한 생각에서 개인의 행위를 단일한 계획에 맞추어 수행하고 개인의 행복도 공동체의 이익에 종속시키려는 사회적 시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의 결

과를 철저히 계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합리주의에 빠져있다.

이상의 논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시장에서 개인은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그의 시장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사회적 정의의 요구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에 의하여 그러한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합리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적 체계로 이행할 뿐이라고 한다.

②의 보상체계의 수립은 사회적 정의론이 주장하는 평등의 문제이다. 즉 사회적 정의란 경제적 물질적 평등을 실현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상을 어떤 공적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공적이란 성과의 가치가 아니라 행위의 도덕적 특성이다(Hayek, 1960:94). 보상을 행위의 도덕적 특성에 따라서 할 때, 적어도 실패에 대한 보장은 가능하고 현실에서의 극심한 불평등은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의 도덕적 특성 또는 공적에 따른 보상은 그 이상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특성 또는 공적을 명확히 평가할 기준의 설립이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공적에 따른 보상체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과가 결코 보장될 수 없는 시장질서내의 개인의 행위의 특성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시장질서내에서는 오직 결과의 가치만이 보상받는 데 비하여 공적에 따른 보상은 이러한 불확실한 결과까지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공적에 따른 보상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시장질서에 부합되는 결과의 가치에 따른 보상을 주장한다(Hayek, 1960:96).

평등을 개념상으로 규정할 때 우리는 평등의 약의미(weak sense of equality)와 평등의 강의미(strong sense of equality)로 구분이 가능하다(Barry, 1965:119-122). 평등의 약의미란 인간의 근원적이고도 정신적인 특성을 주시하며 인간의 표면적인 차이에 의한 근원적, 정신적 권리의 차별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예로서 남녀노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면 똑같이 선거권을 가

지거나 인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요구 등이 그것이다. 평등의 약의미는 인간의 자연권 및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평등의 강의미란 현실적인 차별을 거부하는 요구이며 능력의 차이나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분배적 정의의 요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하이에크가 비판하는 것은 바로 강한 의미로서의 평등이다. 그는 “물질적 평등과 자유는 화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Hayek, 1976:181). 그에게 있어서 평등이란 법 앞의 평등이며 이를 통한 기회의 평등이다. “법의 지배에 의한 평등은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이다(Hayek, 1960:85). 여기에서 우리는 하이에크가 물질적 평등보다는 자유를 우선시키는 즉 그의 첫째 명제를 재확인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은 “필요한 결과이며 자유의 부분적 정당화”이다(Hayek, 1960:85). 사실적 평등이란 하이에크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평등관은 베리(Barry)의 분류에 따를 때 기본권으로서의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평등의 약의미에 머무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정의의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결과의 공적에 대한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노력의 객관적 결과의 가치에 따라 동등하게 보상받는 때에만 유효하게 된다.

제 3 절 자유주의 명제의 평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도 우선시키는 그의 첫 번째 명제에 있다. 이것은 하이에크의 사상에 있어서 칸트의 정언적 명령(定言的 命諭: categorical imperative)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다른 명제들은 쉽게 추론된다.

우리는 하이에크 사상의 특징을, 두 번째 명제와 관련하여 정의

에 대한 공리주의와 계약주의의 입장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법의 본질에 관한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논의는 실정법 이외에 다른 초월적 법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연법사상은 보편적인 도덕원리 또는 자연의 원리에 입각한 법을 추구하고 법의 준거로서의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명령되었기 때문에 법”인 실정법의 우위에 두어 모든 실정법의 정당성을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연법사상은 법률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다는 이의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 규범에 대한 규범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법이론은 논자의 주장과 주관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게 되며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

이에 대해서 법실증주의는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법의 개념에 정의나 기타 도덕적 가치에 관한 고려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법 이론은 켈젠의 순수법학에서 잘 드러나는데 켈젠은 법규범의 최상층에 그 자체로서 정당하다고 전제된 근본규범(*grundnorm*, *basic norm*)을 상정하고 이 근본규범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헌법, 법률 및 명령과 규칙을 차례로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논리적 체계를 이루어 법적인 결정은 사회적 목적, 정책, 도덕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결정된 법적 규정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역될 수 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법 이론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임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일단 어떤 주권자에 의하여 법이 제정되었을 때, 비록 그것이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법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이때 악법에 대한 저항을 법실증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악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법의 이름으로 탄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이에크의 자유의 법은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자유의 법은 입법의 법에 대한 초법적 원리로 기능하며 이때 입법의 법이란 법실증주의에 있어서 실정법에 해당한다. 하이에크의 법철학은 법실증주의의 오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Hayek, 1976:44-48) 그에 의하면 법실증주의는 자생적 질서의 원리와 조직의 원리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법의 원리를 사법의 영역 즉 자생적 질서의 사회생활의 영역에까지 확장시켜 추론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조직은 목적이 있으며 인간 의지의 소산이므로 그 조직에 관한 규칙으로서의 법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생적 질서로서의 사회와 그 속에서의 개인의 행위는 특정한 공통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법 역시 특정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때 법은 결코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단지 법의 적용 절차만 지시할 수 있을 뿐이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한 것이 법실증주의자들의 구축주의적 오류(構築主意的 誤謬:constructivist fallacy)라고 한다(Hayek, 1976:48). 하이에크의 자유의 법은 자연법론과도 구별된다. 자연법사상은 보편적인 도덕원리 또는 자연의 원리에 입각한 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세계 또는 물질계의 불변의 질서로서의 자연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문화 현상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는 사회 속에서 내재해 있는 것이지 외부적 초월적 원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자생적 질서에 의해 배태된 자유의 법 역시 사회에 내재해 있는 것이지 외부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은 사회의 진화에 따라 마찬가지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며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 이론을 하이에크는 “법에의 진화론적 접근법”(evolutionary approach to law)라고 하는데(Hayek, 1976:60) 이러한 진화론적 접근법은 그의 법이론이 자연법론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이에크의 법이론이 법실증주의와 자연 법이론에도 입각하지 않았을 때 법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 시행되어야 하는 가라는 근본적 문제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부터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으며 의지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미 인정된 규칙과 모순되지 않고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규칙이 보편성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추론 과정에 의거 할 뿐이다”(Hayek, 1976:52) 라고하여 법의 정당성으로 추론과정을 내세운다. 이러한 추론과정은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재판관은 추론과정에서 경험에 입각한 반증가능성(反證可能性 : falsifi ability)에 입각하여 법체계를 세워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입장은 그의 법 이론이 영국의 “콤포먼로”(commom law)체제에서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닌 경험이며 법은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유동적으로 창조되어간 콤포먼로의 체계에서는 인간사회의 특성과 구조, 질서 및 성격은 자연질서 및 자연 법칙과 구별되며 이러한 점이 하이에크의 법철학에 전제되어 있다 (Hayek, 1973:135).

정의는 공정성(fairness)의 분배적 측면과 올바름(righteousness), 도덕성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 올바름으로서의 정의는 공정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인식론적 질문은 일단 배제시키고 정의를 교환적 정의(communicative justice)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로 구분한다. 교환적 정의란 도덕적 호혜성(moral reciprocity)에 입각한 불편 부당성을 의미한다. 교환적 정의란 공정성의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따라서 교환적 정의에 입각한 거래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한 만큼만 취하게 되며 이에 반하여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익을 공적이나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외에도 정의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 본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로 구분할 수 있다. 절차적 정의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의 과정이 정당했을 때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본질적 정의에서는 어떤 행위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을 가져야하는가 혹은 어떤 속성이 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장해 주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Barry, 1965:chapter.1).

이와 같은 우리의 명확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대한 논의는 위의 여러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우리는 현대의 정치철학에서 정의에 대한 세 가지의 상이한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유주의(libertarian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 및 계약주의(contractarianism)의 접근방식이다(Philip pettit, 1980).

이들 세 접근방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주의의 정의는 적법성에 근거한다(Nozick, 1974:150). 특히 자유주의에 있어서 분배는 결과적 평등보다는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점은 노직의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에 잘 나타나 있다. 노직에 의하면 과정이 정의로우면 어떤 소유물의 획득과 이전도 정의로운 것이며 각 개인의 소유가 기만이나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체 소유물의 분배 체제도 정의로운 것이라고 한다.

공리주의에 있어서 과정의 기준은 효용이다. 이것은 벤담의 명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공리주의에 있어서 어떤 행위는 그것이 결과하는 고통과 쾌락의 크기를 비교하여 쾌락이 크면 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사회의 어떤 제도가 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배의 문제도 어떤 체제가 사람들의 효용을 증대시키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계약주의라 부른 접근 방식은 롤즈(Rawls)의 정의론이다.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 합리적 개인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 상태와 같은 계약의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제도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때 선택은 최소극대화의 원리(maximin principle)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이러한 선택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Rawls, 1971:60).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①불평등은 최소 수혜자(least advantaged)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②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들 두 원칙은 반드시 축차적으로 배열된다. 즉 첫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 중에서도 ②는 ①에 우선한다. 그리하여 첫째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둘째 원칙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과도 교환될 수 없다. 따라서 첫째 원칙은 자유주의적 이념을 표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원칙은 불평등을 조정하려는 평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제 1절에서 하이에크의 기본 명제는 하이에크의 정의론이 가장 자유주의적임을 보았다. 그는 특히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통렬히 비판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잘못된 근거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Hayek, 1976:17-23). 첫째 공리주의가 주장하듯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위해서는 개인의 모든 효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하나의 목표에 사회를 맞추려는 구축주의적 합리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자생적 질서와 작위적 질서를 구분한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난 점 들이다.

하이에크의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Hayek, 1976:100). 첫째는 롤즈의 정의

의 원칙의 도출과정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롤즈의 정의론에서도 여전히 구축주의적 합리주의의 방법이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과정이 도덕적 기하학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하이에크와 롤즈는 도덕적 가치에 따른 분배를 거부하는 점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롤즈는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예측과 도덕적 가치를 구분하는 데 롤즈에 의하면 공정한 분배체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 도덕적 가치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는 하이에크의 카탈락시의 원리와 유사한 것이다.

제 4 장 하이에크의 시장경제론

제 1 절 지식과 경쟁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로써 시장질서를 드는데, 그는 시장에서 배태된 질서가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경제”(economy)와 어떻게 다른가를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현대에 있어서 경제라는 말은 이와 같은 자생적 질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단일한 목표가 운영자의 제한된 지식만으로 추구되는 조직을 의미하게 되어 시장질서의 본질을 충분히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대 희랍어에서 빌어온 “카탈락시”(catallaxy)라는 말로써 이러한 혼란을 피하려고 한다(Hayek, 1976:108-109). 시장에서 형성된 질서로서의 카탈락시에서는 다양한 목표가 다양하게 추구되며 모든 구성원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문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이론의 출발점은 지식의 분화 (division of knowledge)이다. 즉 분산된 지식을 분권화된 경쟁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계획에 의한 경제적 문제의 논리적 해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계획의 여러 곤란한 점들이 왜 극복될 수 없는가를 고찰한다. 분산된 지식과 분권화된 경쟁체제에 입각한 그의 경제이론에서는 경기변동의 분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총량개념(aggregates)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 가격체계에 의한 생산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경기의 변동을 가져오는가를 본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국민소득이나 물가수준과 같은 총량개념에 의한 현대의 거시 경제적 분석의 취약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시장경제는 카탈락시라는 용어가 대변해 주듯이 자생적으로 조화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동 메카니즘이

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이론의 중심과제들을 고찰함으로써 카탈락시의 게임의 원리(principle of the game of catallaxy)를 밝히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시장경제이론은 현실에서는 언제나 균형(equilibrium)으로 가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①어떤 조건하에서 균형은 존재하는가 ②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지식이 변화하는 과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다(Hayek, 1949:45). 즉 분권화된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의 개입이 없이도 수급의 균형이 유지되는데, 이러한 균형의 조건과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과제는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신고전파의 균형분석과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전제되는 가정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하이에크의 논의는 지식을 과학적 지식 즉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른 특수한 상황의 지식으로 구분함으로써 시작된다(Hayek, 1949:79-80). 과학적 지식이란 객관적 사실(objective facts)에 대한 일반적 법칙을 추구하는 지식으로써 이것은 자연과학의 주된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는 특수한 사건과 예외적 사실들은 법칙의 반증자료로써 쓰여 질 뿐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적 대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관찰자의 주관적 가치, 심리적 상태 및 성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지식은 언제나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이다. 하이에크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추구를 과학주의(scientism)라고 부르고 이러한 과학주의를 사회과학에서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것을 엄중히 비판하고 있다.¹¹⁾ 자연과학은 경험을 형

11)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과학적 방법을 사회과학에서 잘못 사용한 예로써 객관주의(ch.5), 집단주의(ch.6) 및 역사주의(ch.7)를 들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심리적 과정의 물리적 근거를 탐구하거나, 사회나 경제를 전제로 다루어 대상화하여 법칙을 추구하는 바, 이들은 모두 과학적 지식과 주관적 자료를 혼동하고 있다(Hayek, 1952).

식적·수학적 언어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대상인 객관적 사실은 고정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대상은 사람들의 의견과 개념들이며 이것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다. 또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사회과학의 사실들은 자신의 행위가 관찰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견해일 뿐이다(Hayek, 1952:40). 따라서 이들은 수량화되거나 공식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과학적 방법의 사회과학에의 적용의 한계는 명백해 진다.

개인의 경쟁적 행위는 객관적 사실이 자료(data)로써 주어질 때 얻어지는 주관적 지식에 의존한다. 하이에크가 기존의 균형분석을 비판하는 점은 균형분석은 객관적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객관적 사실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객관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분석은 동어반복(tautology)에 불과하다(Hayek, 1949:34). 왜냐하면 실제로 균형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즉 자유의 수집을 통한 개인의 행위가 상호 영향을 끼치는 과정과 그것이 시간을 통한 변화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모든 자료가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분석에서 사상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경제현상은 객관적 사실의 부분과 더불어 그 대상이 관찰자 자신을 포함하는 주관적 자료이며 이것이 자연과학적 현상과 구분되는 점이다. 균형 분석은 객관적 사실만을 다룸으로써 순수한 논리의 추구에는 성공했지만 경제현상의 설명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오류는 경제계산(economic calculus)에 있어서도 실제로 설명해야 할 부분은 선택적인 전제조건 속으로 몰아넣어 버림으로써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Hayek, 1949:89-91).

하이에크에 있어서 지식은 주관적 선택의 기초가 되는 정보(information)이다. “내가 말하는 지식이란 오히려 특수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즉 이러한 지식은 지식의 소유자가 시장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물품과 용역이 수요되며 얼마나

긴급히 요구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때 유용한 것이 된다.”(Hayek, 1978:182). 정보로서의 지식은 지식의 발견자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지식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견되어 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경쟁이다(Hayek, 1978:179-190).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예상에서 벗어남으로서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게 된다. 발견 과정으로서의 경쟁에서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행위규범의 수립뿐이다.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은 기존의 경쟁이론과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한다. 가령 기존의 완전 경쟁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동질의 재화(homogeneous goods)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의하여 수요·공급된다. 둘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진입 및 가격과 자원의 이동에 제한이 없다. 셋째 시장의 모든 참가자는 관계되는 요소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의 전제 조건 가운데에서 하이에크는 특히 “완전한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Hayek, 1949:95). 완전한 지식이란 가령 생산자는 재화 생산의 최소비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또한 소비자의 기호와 욕망을 알고 있어서 어떤 재화를 어떤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시장의 실제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획득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지식을 구분하지 않고 지식이 획득되는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재화의 동질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경쟁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대체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재화들이 수요자의 기호에 맞추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균형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오히려 전제 조건 속에 묻어버림으로써 동어반복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들이다. 따라서 경쟁의 의미는 오히려 이러한 전체 조건들 없이 지식이 획득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할 때 분명해 지는 것이다. “경쟁은 본질적으로 의견의 형성과정이다. 즉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서 그것은 …경제체제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창출한다. 그것은 무엇이 최상의 것이며 가장 저렴한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창출한다… 따라서 그것은 자료에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들이다.”(Hayek, 1949:106). 경쟁의 기능은 시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적합한 지식을 참가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즉 경쟁을 통하여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의견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참가자는 자신의 자료를 계속 수정한다. 그러므로 경쟁은 동태적 과정이며 지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이다. “실제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한계비용에서 주어진 재화나 용역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재화와 용역이 사람들의 욕구를 가장 값싸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의 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알려지지 않는 것제로의 탐구의 여행이며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¹²⁾

주관적 지식은 사회내에 존재하는 전체 지식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이에크는 노동의 분업에 유추하여 지식의 분화라 한다(Hayek, 1949:50-51).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내의 분산된 지식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체제가 가능하다. 하나는 경쟁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획에 의한 것이다. 경쟁에 의할 때 이것은 가격기능에 근거하는 분권화된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며 계획에 의할 때 이것은 중앙집권화된 계획 경제체제에 의하는 것이 된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분권화된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은 각 개인의

12) 지식의 분화와 노동의 분업에서 이용되는 지식은 전자가 주어진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선택의 능력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후자에서는 필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skill)을 의미한다는 점이다(Hayek, 1949 : 100).

분산된 지식이 모두 활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가격은 이때 하나의 신호로써 작용하며 각 개인의 1차원(次元)씩을 차지할 때 가격의 변동을 통하여 n -차원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중앙집권화 된 계획 경제체제에서는 의사 결정이 계획 입안자의 지식에만 의존하므로 이 분산된 개인의 지식을 모두 활용할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n -차원의 균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질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이 점에 관하여 자유기업을 통한 경쟁질서의 수립을 희망하면서 “경쟁은 정부의 특정 활동에 의거할 때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임”(Hayek, 1949:110)을 인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경쟁질서의 수립을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있어야 하며 또한 실업자 및 극빈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냐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모든 것은 그러한 대책이 바람직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그것이 시장을 최소한도로 간섭하도록 하는가이다.”(Hayek, 1949:112).

제 2 절 경쟁과 계획

우리는 앞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구성되는 지식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경쟁을 정보의 발견과정이라 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신호로 작용함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고찰했다. 여기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할 때도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즉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계산에 의할 때에도 사회의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계획이 주어진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사회주의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본격화 된 것은 독일어권에서의 1920년대의 산발적인 시도에 뒤이어 1935년 하이에크가 「집산주의 경제 계획」(*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Hayek, 1935)을 편집한 때를 전후한 1930년대였다. 여기에서 하이에크는 미세스(Mises)의 논의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중대한 장애요소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현실적인 해결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하이에크의 현실적 해결 가능성의 부정의 근거를 살펴보고 그것이 경쟁을 주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 어떤 시사를 주는가를 살펴본다.

우리는 앞에서 지식을 과학적 지식과 특수한 시간에 따르는 지식으로 구분하고 사회과학적 지식이란 후자에 근거한 주관적 지식임을 보았다. 지식의 이러한 구분은 경제문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다. 경제적 문제는 특수한 상황과 시간에 관련하여 다양한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선택과정이며 이러한 다양한 목표와 수단은 미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문제는 주어진 목표를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려 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모든 경제체제에 공통된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비용을 고려하게 한다. 이러한 비용의 상호비교는 경쟁체제하에서는 화폐로 표시된 가격에 의존할 때에 가능하다.

계획과 필요한 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회주의 하에서도 자원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비용을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경제적 문제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거했을 때에도 경쟁에 의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서 보는 것만큼의 효과가 보장되는가라는 점이다. 계획은 무엇보다도 자원의 이용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당국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때 중앙당국의 자원 배분은 다른 개별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이용에 대한 요구와 상충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중앙당국이 실제로 무수히 많은 다른 여러 목표사이에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해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와 같은 거대 사회의 복잡한 조건하에서 중앙당국이 경쟁 자본주의의 결과에 비견하거나 근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정확도와 성공도를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Hayek, 1949:131).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 자체의 수립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이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속성에 관한 문제와 이러한 정보의 획득에 어떤 난점이 따르는가이다. 다음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는가라는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이런 점들에 관련하여 사회주의 경제 계산의 비현실성을 비판한 하이에크의 주장을 들어본다.

계획의 수립에는 자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지식이 필요한가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경쟁체제에서 보장되는 수준까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완전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가이다. 하이에크는 이에 대하여 정보의 추계에 따르는 통계적 기술의 난점(difficulty of statistical technique)을 지적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Hayek, 1949:153-156).

먼저 계획담당자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준, 자본, 상품 등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정보를 소유해야 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즉 경쟁체제에서 가능한 정도까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계획당국의 계산은 존재하는 모든 도구와 재화의 개별적인 차이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의 기호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우리가 주관적 자료로서의 지식의 특성이 과학적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할 때 밝혀진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없는 경제 계산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 경제 계산의 첫째 문제는 정보로서의 지식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유래된다.

설령 이러한 통계적 난점이 극복되어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계획의 수립에는 또 다른 문제가 따른다. 즉 생산량 결정의 문제이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생산해야 할 재화와 같은 수의 미지수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생산해야 할 재화의 수와 양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이에 상응하여 연립방정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해를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해가 구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 순간 집행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난점이 따른다.

그러나 만일 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계획의 수립 및 전달이 가능하다고 해도 계획의 집행 즉 경영상의 문제가 따른다(Hayek, 1949:172-176). 모든 자원과 생산수단이 공유되어 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원과 생산수단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은 자원과 생산수단의 희소성에 당면하여 누군가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여기에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사람의 사업이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업에는 위험이 수반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장래의 성공을 위하여 용인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험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명확히 설정될 수 없다. 현재의 낮은 위험성이 반드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난점을 가격 기구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제 1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경쟁을 통하여 위험도의 성공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란 처음 예상했던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위험도를 충분히 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을 때 이것은 계획이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비용 계산의 문제를 보자. 하이에크에 있어서 비용의 개념은 생산요소에 지불된 보수와 총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에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의 비교에서 구해지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경쟁 시장에 있어서 동일 산업내의 개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비용과 자신의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의 산출은 가능하며 이것은 경쟁시장에서 생산물의 가격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 상품이 오직 한 기업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독점 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은 현재의 수익과 미래의 수익에 기초해서 추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익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미래의 수익을 명백히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능한 것은 예상가격일 뿐이다. 그러므로 독점산업의 비용계산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의 비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생산물 가격과는 무관한 요소의 비용이 아니고 준 렌트(準 Rent) 혹은 ...감가상각율이며 이러한 것들은 미래의 예상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Hayek, 1949:168) 즉 감가상각율이나 준렌트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된 후 계산이 가능하듯이 미래의 수익을 현재적으로 계산할 방법은 없다.

중앙계획 당국의 비용계산은 독점 사업의 경우와 유사하다. 독점

13) 이러한 하이에크의 비용개념은 오스트리아학파의, 특히 시간의 요소를 매우 중요시하는 Böhm-Wawerk의 이자이론에서 유추된다.

기업은 시장에서 비용과 독점이윤을 포함하는 가격을 설정한다. 가격 설정자라는 점에서 중앙계획당국은 독점기업과 같다. 여기에서 계획 담당자의 과제는 한계 비용과 일치하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 담당자의 비용산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 때의 비용산출은 경쟁이 없으므로, 독점 산업의 경우와 같이 이시적 비교(異時的比較:intertemporal comparison)로서 가능하지만 장래의 비용 혹은 가격의 현재적 산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에서 이용되는 지식의 특성에 근거하여 계획경제하에서의 경제 계산의 난점을 고찰했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경쟁에 의할 때 더 효율적이며 이러한 경쟁의 기초는 사유재산제도이며 이러한 근거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비인격적인 경제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분산된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제 3 절 자율과 조화

지금까지 고찰한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그의 방법론은 주관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것은 1870년대의 한계혁명에 근거하여 주관적 가치이론을 전개시킨 오스트리아학파의 전통을 잇는 것이다. 주관적 가치이론은 사물의 성질에서 가치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기원을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이 목적체계를 지향하면서 수행하는 수단의 선택과정에서 찾으려 한다(Hayek, 1949:45). 목적-수단 체계에서는 자원의 희소성에 따라 주관적 효용이 도출되고 이에 따라 각 경제주체는 가장 합목적적인 선택을 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가치이론이 경제학의 방법론을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구별하게 된다고 한다(Hayek, 1944:34-36). 둘째 주관주의와 관련하여 하이에크의 방법

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입각해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전체 사회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키고 개인간의 이익은 외부적 간섭없이도 조화 가능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개인은 원자적으로 취급되며 집단은 개인의 목적달성의 수단이 된다. 개인주의의 최대의 적은 집단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산주의이다. 셋째 균형분석에 있어서는 균형상태보다는 균형으로 도달해 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여기에서 정보로서의 지식에 관한 그의 독특한 이론이 전개된다. 즉 시장에서의 균형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경쟁에 의하여 가능하고 이러한 균형이란 결코 안정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넷째 그의 경기변동론에서의 주된 관심은 총량(aggregates)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였다. 하이에크는 국민소득이나 물가수준과 같은 거시경제적 총량의 유의성에 극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총량개념은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이 전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왜 어떤 욕망, 그리고 특정인의 욕망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충족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케인즈 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논리적 귀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의 특성은 모두 시장경제의 자율과 조화의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제 2절에서 보았듯이 균형 분석에서 “균형으로 향하는 경향의 존재”(the exsistance of the tendency toward equilibrium)를 확신하고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결이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한 해결보다 우월하다는 그의 논증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시장기구의 자율에만 의존하는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계획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전체 경제에 대하여 한 사람에게 의하여 중앙집권적으로 수행되느냐 혹 여러 개인 사이에 나누어져 수행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그의 언급

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즉 그가 반대하는 것은 중앙집권화 된 계획 당국에 의한 계획이며 분권적 계획은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권적 계획이란 하이에크에 의하면 경쟁을 의미한다.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계획이란 예측을 하기 위하여 현재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계획이란 모든 경제 주체의 합리적 행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행동은 시장에서 조화 가능하므로 그에게 있어서 계획이란 곧 경쟁을 의미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통화량 증대로 인한 과잉투자와 그에 따른 과잉소비 및 생산구조의 수축을 불황의 요인으로 보는 하이에크의 경기 변동론에서는 현대의 은행제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Hayek, 1933:143-144, 150). 자유 은행제도는 시장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교란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신의 증대로 인하여 시장 이자율을 자연 이자율과 더욱 괴리시킴으로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교란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은행의 기능에도 일정한 한계와 규칙이 주어져야하는데 현대와 같이 국가가 발권업무(發券業務)를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¹⁴⁾

이와 같은 인위적 제도의 기능에 대한 불신에서 그는 곧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로 옮겨간다.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에서 전제되는 것은 필요한 자원의 완전고용과 가격의 신축성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시장기구에 의할 때 가격에 의한 조정 과정은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게 되고 이것은 잘못 된 투자를 시정하며 균형의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설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노동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14) 저서에서 하이에크는 화폐를 비국유화하여 화폐제도에 자유경쟁제도의 도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Hayek, 1976b).

노동조합의 담합은 오히려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회복을 통한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금의 신축성이 요구된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노동이 필요한 산업사이에 잘못 배분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불황을 야기시키며 실업의 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각 산업간의 자원 배분의 왜곡과 잘못 책정한 상대가격을 교정하는 것이 불황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된다.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교란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케인즈의 실업이론은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시장기능의 왜곡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위와 같은 이론들은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파적 가정들에 입각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영국과 미국에서의 공황을 고전파 이론에 의해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었다고 본다. 1920년대 영국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는데 1925년 영국 정부는 금본위제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전의 패리티(parity)로 복귀한 결과 영국 통화(sterling)의 가치는 과대평가되어 실질임금은 다른 나라보다 높게 되고 영국 상품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임금과 영국 상품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당시 영국의 특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당면하여 유효수요의 부족이 실업의 원인이었다고 잘못 진단했다는 것이다.

유효수요의 부족을 실업의 원인으로 보고 소비재 수요의 증가가 투자재 수요의 증가를 가능케 한다는 과소소비론에 대하여, 하이에크의 논의의 요점은 과잉소비가 불황의 원인이며 이는 잘못된 경제 정책과 상대가격체계의 경직성에 기인한 자원배분의 왜곡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비재 수요의 증가가 언제나 투자재 수요의 증가를 초

래한다는 과소소비론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서 그는 리카도 효과(Ricardo effect)를 예시한다(Hayek, 1949:220-254). 리카도 효과란 임금의 상승은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도록 하며 반대로 임금의 하락은 기계를 노동으로 대체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황국면에서는 소비재 수요의 증가로 소비재 가격은 상승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므로 기업가들은 자본재보다는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려 하고 이것은 생산의 과정을 단축시켜 더욱 자본재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불황국면에서는 실질임금은 높이므로 노동을 자본재로 대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자는 증대하게 된다. 이것은 과소소비론과 반대의 결과인 셈이다.

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자유주의의 형성, 변화 및 신자유주의 대두과정을 그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유주의의 기본명제 제 1항에서 보듯이 하이에크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았다는 사실은 그의 사상의 가장 큰 의의이자 또한 한계라고 생각된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의 문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국가를 형성한 이래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미해결의 테마이지만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의 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노예의 길”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자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의 의의는 실로 지대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추구가 평등의 문제와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 점은 자유주의 역사에 있어서 자유주의가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 온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하이에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그의 자유주의 사상 역시 어떤 행위의 절차가 부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의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있으며, 보상 체계에 있어서도 하이에크의 입장을 따를 때, 결과에 있어서는 극심한 불평등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문제는 하이에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패자에 대한 구호를 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도가 하이에크의 사상체계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그가 누진세에 반대하고 있으며 타고난 재능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재산상속의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는 그의 논의가 이를 입증한다.

자생적 질서로서의 그의 사회관의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즉 인간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념은 그들 자신의 필요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근대로부터의 경험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축적된 경험이 빈곤한 사회에서는 자생적 질서로 사회를 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그의 사회관이 주로 영국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일찍이 의회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최선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성공한 나라였다. 그러나 경제사(經濟史)에서 보여 주듯이 후발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그의 자유주의 사상은 개발경제학으로써는 이용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의 분화론에 바탕을 둔 그의 계획경제의 비판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지식이 편중되어 있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의 경우에는 수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의 경제이론에 전제된 가정들을 검토하여 보자 하이에크는 모든 가격이 탄력적이면 시장기능에 의할 때, 완전고용균형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가격의 신축성은 비현실적인 요구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장경제가 완전고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는 미지수다. 이점은 하이에크의 경제이론의 모델이 선진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실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이며 성장보다는 안정에 주력하게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이, 안정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경우에는 케인지언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 유효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전제된 보통의 능력을 가진 원자적 인간의 형이 하이에크에 있어서도 여전히 견지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형은 현대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원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씨족과 같은 혈연이나 또는 지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집단의 성원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곧 자유주의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합리적 자유주의의 전통을 갖지 않는

사회에 수용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효율의 추구속에서 매몰되어 가는 인간의 가치를 분연히 수호하고자 자유주의의 이념을 환기시킨 하이에크 사상의 의의는 실로 지대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자유가 수호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대의 대중민주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점, 또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과학방법론이 인간과 그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에 적용되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점 등은 그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자유야말로 인류 문명을 창조한 원동력이었으며 자유로운 인간의 활동은 진보를 가능케 하고 이것을 통하여 인류의 많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인류의 진보를 믿는 낙관론자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이에크의 사상을 자유주의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리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가능한 역할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우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의 형성기반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 관한 연구이다. 맹거를 시조로 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그 독특한 방법론 뿐 만 아니라 자본이론, 이자이론 및 화폐이론 등에서 매우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하이에크의 사상을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계획에 관한 하이에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이론과 계획경제이론은 서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특히 개발경제학으로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케인즈 경제학과 관련하여 하이에크의 경제학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업이 만연한 사회와 급속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넷째 다른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하이

에크는 자신을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최근의 신보수주의의 흐름에 프리드만과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교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Hayek 저서들

- Hayek, F.A. (1933),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 (New York : Augustas M.Kelly).
- (1935),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New York : Augustas M.Kelly).
- (1944/1994), *The Road to Serfdom*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reprinted in 1994 fiftieth anniversary edition), 김영청 옮김(1992), 「노예의 길」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 (1949),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 (1952), *The Counter Revolution of Science* (Indianapolis : Liberty Press).
-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 Loutledge and Kegan Paul), 김균 역(1997) 「자유헌정론 I II」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1973),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1 : Rules and Order*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양승두정순훈 옮김(1991), 「신 자유주의와 법」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1976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2 :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 (1976b), *The Denationalization of Money : An Analysi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ncurrent Currencies* (London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1979),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3 :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2. Hayek 관련 저서 및 논문들

(1) 국내서

김 균 (1996), “하이에크 자유주의론의 재검토 : 자생적 질서론을 중심으로” 김균외, 「자유주의 비판」 (서울 : 풀빛).

김 균 박순성 (1997), “하이에크 자유주의의 폐쇄성과 내적 균열” 「사회 비평」 제 17호 (서울 : (주)나남 출판).

동아일보사(편) (1975), 「세계인권선언」 (서울 : 동아일보사).

민경국 (1996), 「진화냐 창조냐」 (서울 : 자유기업센터).

박우희 (1982), 「하이에크」 (서울 : 유풍출판사).

박종찬 (2002),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1)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월간조선, 2002, 10」.

박진근 외 (1990), 「경제학 대사전」 (서울 : 박영사).

박충석 (1982),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 삼영사).

임일섭 (1999), 「행동규칙과 자생적 시장질서」 (서울 : 자유기업센터).

정인홍 외 (1975), 「정치학 대사전」 (서울 : 박영사).

조순 외 (1995), 「하이에크 연구」 (서울 : 민음사).

(2) 영문본

Berlin, I. (1969), *Four Essays on Liberty* (London : Oxford Univ. Press).

- Barry,B. (1965), *Political Argument* (London : Loutledge and Kegan Poul).
- Dalton, G. (1974), *Economic System and Society* (New York : Penguin books Ltd.,).
- Ebenstein, W. (1969), *Great Political Thinkers : Plato to The Present, 4th eds.,* (New York : Holt, Richard and Wiston).
- Galbraith, J.K (1956), *American Capitalism :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 and 2nd ed.,* (Boston : Houghton Mottlin co.,).
- Hobbes, T. (1651/1958), *Leviathan* (Indianapolis : The Library of Liberal arts).
- Hobhouse, L.T. (1971), *Liberalism* (Oxford : Oxford Univ. Press)
- Hutchison, T.W. (1981), *The Politics and Philosophy of Economics* (Oxford : Basil Blackwell).
- Johnson, H.G. (1975), *"Keynes and British Economics" in J.M.Keynes Essay on John Maynard Keyne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Keynes, J.M.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 Macmillan).
- _____ (1963), *Essay in Persuation* (New York : Boston Library).
- Laski, H.G. (1954), *Liber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 Geoge Allen and Unwin Ltd.,).
- Locke, J. (1690/1952),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Chicago : Encyclopedia Britamca, Ins.,).
- Macpherson, C.B. (1977), *The Life and Times of Liberal*

- Democracy* (London : Oxford Univ. Press),
배영동 역(1979), 「전환기의 자유주의」 (서울 :청사).
- Machlup, F. ed.,(1977), *Essay on Hayek*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Oxford :
Blackwell).
- Pettit, D. (1980), *Judging Justice :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London :
Loutledge and Kegan Paul).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S.
: the Belknap Press).
- Rosenberg, N. (1979), "*Adam Smith and Laissez-Faire
Revisited*" in G.P.O'Driscoll ed., *Adam
Smith and Modern Political Economy*
(Iowa : The Iowa state Univ. Press).
- Sabine, G.H. (1959),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Henry
Holt and Company, Inc.), 민병태 역(1963),
「정치사상사 전후」 (서울 : 을유문화사).
- Smith, A. (1776/1937),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 (New York
: The Modern Library), 김수행 역(1993), 「국
부론 상 하」 (서울 : 동아출판사).
- Tocqveille, Alexis. (1835), *Dela Democratie en Amerique*, 이
영범 역(1963), 「미국 민주주의」 (서울 : 사상사
출판부).

ABSTRACT
A Study on Hayek's Libertarianism

Kim IL-Man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this dissertation I aim to investigate the libertarianism and the economic thought of F.A.Hayek from the view poi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y of libertarianism and the theory of market economy. liberalism is the product of modern western history and it is well-known that the liberalist economic thought has formed one of the great tradition in the western history of economic thought.

In chapter 2, the fact that liberalism is the product of history, however, gives birth to the various forms of liberalism. It is then imperative in the study of liberalism to classify those various forms. Before making a classification we see the main task of liberalism is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from political power. although it seems at first that the smaller the political power, the greater the individual liberty, the dilemma is no individual liberty shall be granted without political power in reality. If we concede the presence of political power as inevitable, it is necessary to delimit the role and realm of that power. The varied views within the liberalist camp have focused on the different opinions on the role of political power or government, and it's reasonable

limits.

Here we categorized the concept of liberty as the negative and the positive because it is possible to taxonomize the different views on government according to those two concepts of liberty.

We outlined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what we call "New liberalism" or "Libertarianism". we showed that libertarianism

could be understood as a response to the danger which resulted from the new trend of the welfare state and its consequential big government.

In chapter 3, we examined Hayek's concepts of liberty. we summarized it as following three basic propositions.

The first proposition : liberty is the source and condition of most moral values. The second proposition : Society is in nature a spontaneous order or cosmos. The third proposition : justice is based on the propriety or legitimacy.

Founded on the three basic propositions in section 2, we examined Hayek's definition of liberty as the absence of coercion, and his classification of "cosmos" and "taxis" and "nomos" and "thesis" and his critique on so-called "social justice". In section 3, we evaluated Hayek's thought in two ways. first, we compared his legal philosophy with the legal positivism and the theory of the law of nature. Here we concluded that his legal philosophy which is based on the English common law tradition is alike with neither the legal positivism nor the theory of the law of nature. Secondly, we reviewed the three approaches of modern Economic and political philosophy toward the theory of justice, libertarian,

utilitarian and contractarian and then we concluded that Hayek's Economic and political philosophy had the very characteristics of libertarian approach. All of Hayek's main arguments could be summarized as the principle of the general rule of law.

Hayek's economic theory which has inherited the austrian school economics has conspicuous aspects,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emporary economists such as Keynes or Keynesians. Three basic concepts play an important role in his economic theory. They are the division of knowledge,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and the relative prices of goods. Based on the three concepts he criticized the so-called scientism in the social sciences, the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and the Keynesian macro-economic policy.

In chapter 4, the main arguments of his economics theory is that the autonomy of the market mechanism survives within far greater limits than is expected in general. Hayek's theory of the free market economy took a part in supporting his libertarian thought and it could be summed up as the principles of the game of "catallaxy"

Based on the two principles, the principle of the general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the game of catallaxy. We could delimit the role of government.

In chapter 5, we pointed out the limits of Hayek's libertarian economic thought, of which we doubted the fact whether Hayek's libertarian thought could be use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 means of full employment and rapid growth.

We concluded with care that Hayek's libertarian economic

thought would play a more efficient role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an in the developing countries.